

현상학적으로 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요인 -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

Factors Involved in the Collection Building in Public Libraries in Pusan, As Viewed from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 with Special Reference to Knowledge-Flow in Korean Society

김 영 기(Young-Ki Kim)**

목 차

- | | |
|-----------------|------------------|
| 1. 서론 - 장서의 사회사 | 3. 금서사건 |
| 2. 도서변상사건 | 4. 결론 - 장서형성의 요인 |

초록

이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사회사를 추적하는 과정에 나타난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이 장서의 축적 과정에 미친 영향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두 축으로 하여 축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은 이런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도서관에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만하다. 이들 사건은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창의성을 말살시키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편향성을 띤 채 축적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Book-compensation Event> and <Banned Books Event>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building in public libraries. These events resulted in depriving library workers of their voluntary spirit. And these events have also become a main cause of ideological prejudices as reflected in collection building.

* 이 연구는 다음 글의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씌어졌다.

김정근·김영기, 1996, 「공공도서관 이용자문제의 재인식」,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4 1~95쪽; 김영기, 1998, 「공공도서관 장서문제의 재인식 - 현대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圖書館文化》(한국도서관협회), 제39권 제2호(1998. 3/4), 31~45쪽; 김영기, 1998,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장서의 사회사」,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53권 제2호(1998 여름), 51~93쪽.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1998년 9월 1일

1. 서론 - 장서의 사회사

원칙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두 축으로 하여 축적된다. 도서관 자료의 선택이나 평가에 관련된 이론들도 이와 같이 가치론과 목적론을 한 축으로 하고 이용자 요구론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도서관 내적인 요인들보다는 도서관 장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극심한 통제와 권위주의가 사회의 모든 변수들을 지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매개변수가 되어왔으며, 도서관의 목적이라든가 이용자의 요구 등은 오히려 종속변수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장서의 사회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김영기, 1998B: 51-93). 공공도서관 장서의 사회사를 시기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사회사는 우리 나라에 최초의 근대적 공공도서관이 탄생한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제강점기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며, 그 장서 역시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근거에 깔고 이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 초기까

지는 특정 이념을 통해 교육이나 출판 등의 문화적 환경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표출된 시기이다. 즉 해방공간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지평이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단독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그 상부구조가 되어야 할 민족적 원리 또는 이념적 지표마저 혼란에서 상실로, 그리고 다시 특정 이념의 강요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념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냉전이데올로기'로 수렴되었으며, 이는 6·25를 통해 고착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외적 환경은 도서관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도서관의 장서로 투영되어 왔던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장서의 축적은 도서관 측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도서관 외적 요인, 다시 말해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이라든가 그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출판환경과 도서유통구조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언론과 출판의 한 영역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장서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자본주의적 외형의 성장과 함께 전문직원의 충원이라든가 의식성을 담보한 전문직 단체의 출현, 전문관장의 보임 등과 같은 주·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장서의 성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비해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방식, 즉 주로 문화적인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시켜 왔으며, 이러한 '유도'에 공공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순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예산이라든가 이용자 요구, 장서 본래의 가치 등으로 설명되고 평가되어온 지금까지의 '보편' 이론보다는 도서관 바깥의 환경에 대한 사서의 자율적·능동적 대응이라는 사회적 역관계의 구도 속에서 찾는 편이 오히려 현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서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사회 환경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반영되어 왔는가. 이러한 질문은 한국사회의 지식흐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치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순치(馴致)되어 왔으며, 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도서관을 길들여 왔는가.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자율성은 어떤 식으로 신장시켜 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외적인 요인이 그대

로 도서관의 장서에 반영되는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만하다. Barritt 등에 따르면(L. S. Barritt 등, 1990, 65-95) 현상학이란 거미줄처럼 정교한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그 자체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며, 선입관을 버리고 발생하는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 현대 공공도서관사에서 발견되는 '경이적인 경험과 일상적인 경험(wonder experience and ordinary experience)'(L. S. Barritt 등, 1990, 73)을 '거미줄처럼 정교한 사회관계' 속에서 '선입관을 버리고' 해석해 봄으로써, 장서형성에 영향을 미쳐 온 실존적인 요인들을 현상학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전개되어 온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련된 이론적 전제를 최소화한 채 현장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초월적인 전문가가 이방사회의 주민을 대신해서 말해주던 시기를 지나 각 집단에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직접적 권력을 가지지 않은 다수인 우리가 역사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역사로 엮어 내는데' 있는 것이다(조혜정, 1994,

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달동네 사람들이 못사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달동네만 파고들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정축재 또는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강준만, 1997, 57).

187-242).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도서변상사건>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족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서사건>은 우리 나라 현대 공공도서관사에 나타난 하나의 경이적인 경험이라면, 현장 사서들의 일상적인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정치 논리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문제로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중견 사서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하나의 금기(禁忌)로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도서변상사건

<도서변상사건>이라는 것은 부산시립도서관에 1976년에서 1977년에 걸쳐, 도서관의 책 분실이 문제가 되어 거액의 현금 변상과 함께 결국에는 관장이 해임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부산시립도서관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공도서관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사서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급속하게 전국의 도서관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때, 부산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한국 공공도서관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이 사건은 이를 경험했던 '고참' 사서들의 사고와 행동의 틀에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있으며, '신참' 사서들에게는 구전을

통한 전설이 되어 남아 있다. 구전이라는 전달형태가 통상적으로 과장과 왜곡의 과정을 겪는 것이 다반사라고 볼 때, 이 사건이 공공도서관 장서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건의 전말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성격에 대한 이해작업이 함께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사건의 전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의 열람과장으로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를 차지했던 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은 당시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김○○ 관장이 나가고 이○○라는 사람이 관장으로 부임해왔다. 그는 관장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 '책을 못 믿겠다, 인계를 못 받겠다'고 하면서 교육청에 감사를 추서 했다. 솔직히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책들이 엄청나게 분실되었다. 교육청에서는 감사 후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었고, 감사원에서는 현물 변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1976년 9월 16일을 기해 14년 남짓 관장으로 재직해 오던 김○○ 관장이 물러나고 이○○가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도서 변상 사건은 바로 이 때의 관장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급기야는 교육청을 거쳐 감사원에까지 보고되고, 분실 도서에 대한 변상과 관장 해임이라는 징계과정을 거쳐 일단락 되게 되지만, 사건 관계자들은 물론 전국의 도서관계

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공공도서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도서관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도서관의 장서가 <도서대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도서관의 역사는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장서 목록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도서 변상 사건이 일어난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해방 정국의 혼란과 수백만의 생사가 엇갈린 전쟁을 비롯한 술한 행정의 공백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의 골마루를 겪어오는 동안 그 장서는 온전할 리가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서의 사회사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장서관리 체계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 차례의 도서관 이전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이 도서관의 장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은 점검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²⁾

다음의 증언은 당시 부산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장서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한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니까 장서인이 여러 개 찍혀있는 책이 더러 보였는데 그 중에는 부산시립도서관 도장이 찍힌 책도 있어서 몇 권을 가져온 적이 있다. 그 사람들[국립중앙도서관 직원] 말로는 고서방에서 샀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6·25 때 도서관의 책을 몇 트럭이나 고서

방에 종이 값으로 팔아먹었다고 한다. 실제로 보수동 고 서점에도 우리 책이 많이 나왔으나 다시 돈주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P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그러나 이런 실정을 뒤로 한 채 감사는 냉혹하고도 엄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교육청의 감사계 직원들과 당시만 해도 ‘잘나가던’ 학교도서관 직원들이 시립도서관의 장서를 며칠에 걸쳐 하나하나 점검”했으며(K2 관장과의 인터뷰), “감사원에서 목록 카드뿐만 아니라 책 권수를 세기도 했다”(K1 관장과의 인터뷰, 1997)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의 감사 결과는 자명할 수밖에 없으며, 일의 의도성에 대한 혐의마저 짙게 풍기고 있다. 어쨌든 감사 결과 엄청난 양의 도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실된 도서에 대해 모두 현물 변상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도서 유통 구조 등을 감안한다면 분실 도서에 대한 현물 변상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서 분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열람과장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녔지만 같은 책을 구하지 못했다. 책값 때문에 서울에서 올라가라 내려가라……(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2) 이런 사정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겪었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도 비슷한 처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도서관에서도 부산시립도서관의 도서분 실사건의 불똥이 주변으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예의주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책 구하러 돌아다니니 밥 사 먹어 야지요 여비 들지요. 그러다 결국 병이 났다. 고민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다. TV 보시다 아 하며 쓰러졌다. 고혈압이었다. 그리고 6개월 입원했다. 정년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죽었다는 사람이 일어났다(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 부인과의 인터뷰).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감사원에서는 현물변상이 불가능하다면 시가대로 변상하라는 재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시가의 2배 변상이 원칙이지만 정상이 참작되어 시가 변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액수는 엄청난 것이었다.

6부 급전을 내고, 5부 달돈을 빌려 변상했다. 300만원 중에서 김○○ 관장이 100만원을 변상하고 내가 200만원을 변상했다. 열람과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월급이 4만 원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돈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월급 받아봐야 뭐 떼고 뭐 떼고 집세 내고 물세 내고, 남은 것으로 이자 갚고 그랬다(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돈으로 몇 백만 원을 물어냈다고 한다. 당시 집값이 백만 원 정도였는데, 급전을 내니 어쩌니 하였다고 들었다. 이 일로 가게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된다(K4 관장³⁾과의 전화인터뷰).

어쨌든 1년 가까이 끌어오던 도서변상 사건은 김○○ 관장이 해임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김○○ 관장은 도서분실의 책임과 다른 일이 겹쳐 직위해제 되었으나 100만원을 변상하고 복직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감원대상이 되었다(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그렇다면 이 사건이 공공도서관의 정서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 공공도서관사에서 최대의 도서변상 사건으로 꼽힐 수 있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을 단순히 소장 자료의 분실에 따른 책임자의 문책과 변상 사건으로만 보기에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감사과정에 앞서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은 도서관 장서의 정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변상금의 액수가 엄청났으며, 관장과 열람과장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갔다는 점이다. 어찌되었던 이 사건은 한국 공공도서관사를 통틀어 변상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었으며, 책 분실이 문제가 되어 관장이 파면 당한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3) 이 사람은 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의 딸로서, 부친의 소원이던 관장이 되어 현재 울산의 어느 공공도서관에서 재직하고 있다.

있기도 하다.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당시 사건의 핵심에서 피해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워서 이 사건을 지켜 본 P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잘라 말하고 있다.

도서관사건은 행정에서 관장 빼앗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였다(P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이러한 반응은 여러 증언과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관장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변천과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지역에 도서관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52년 1월 1일 부산시 조례 제22호로 제정된 〈圖書館職制條例〉로서, 여기에는 '관장에 사서관을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 그러나 곧이어 이 조례는 1962년 5월 20일 부산시조례 제27호인 〈市立圖書館條例〉에 통합되었으며, 여기에는 '관장에 사서관보를 보한다'로 규정이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1976년 1월 7일 〈市立圖書館條例〉(부산시조례 제905호)와 1978년 1월 6일 〈市立圖書館條例〉(부산시조례 제1192호)를 거치면서 '사서직 관장 보임' 규정이 슬그머

니 빠져버리게 되며 급기야 1980년 7월 16일 개정된 〈市立圖書館條例〉에는 아예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사서직의 관장 진출은 봉쇄되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 김○○ 관장이 해임되자 그 이후의 관장은 행정직으로 보임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⁵⁾

또 한가지 이 사건을 행정적이 관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관장직에 대한 조례 개정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 관장이 해임되고 난 이후 행정직 관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P 전 사서과장은 관장이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즉 도서관의 사서과장 조차 모르게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박 전 사서과장 밑에서 일을 배웠던 한 사서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K1 관장과의 인터뷰, 1998).

그렇다면 이 사건이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다음의 증언을 통해서 이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당시의 도서관 분위기는 정보제공,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비 스정신 같은 것

4) 그러나 실제 사서관 관장은 조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1962년까지 관장은 주로 주사서리체제로 임명되어 왔다.

5) 참고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한 관장들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김종문: 1962. 9. 6 - 1976. 9. 16 (14년 10일, 사서직)

이성호: 1976. 9. 17 - 1977. 3. 1 (5개월 16일, 행정직)

김종문: 1977. 3. 2 - 1977. 3. 18 (17일)

고성욱: 1977. 3. 19 - 1977. 4. 21 (34일, 직무대리)

송규직: 1977. 4. 22 - 1980. 8. 19 (3년 3개월 28일, 행정직)

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 관장이 직위해제, 복직, 파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K1 관장과의 인터뷰, 1997).

이 사건으로 인해 14년 동안이나 관장으로 모시던 분이 결국은 도서관을 떠나게 되고, '사람 좋았던' 열람과장이 겪는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 역시 그들이 당한 고통과 피해의식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사회사를 추적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의 파장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책 한 권 분실되면 직접 변상을 했다. 또한 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분실된 도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K3 관장과의 인터뷰).

그 사건 이후로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책 분실에 관한 것이었다. 열람과에서는 변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따로 떼어 적립하기 시작했다(K2 관장과의 인터뷰).

도서분실 문제 때문에 몰래 사비를 털어서 넣은 책이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오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K1 관장과의 인터뷰, 1997).

첫 번째 증언을 한 사람은 현직에 있는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 중에서 가장 '고참' 사서이며, 현재 부산의 모 공공도서관

에서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 두 사람은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사무관으로 진급하여 전문직 관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관장으로 발령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기보다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피해의식은 직원들간의 분열의식까지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산지역에 공공도서관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납특근이다 뭐다 해서 일과 후에 남아 있기가 다 반사였다. 또 한가지 그 당시의 분위기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서과와 열람과의 인사이동을 포함한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변상금을 떼는 일도 열람과 직원만 했으며, 심지어 사서과에서 연장근무를 위한 특근 지원도 해 주지 않았다(K2관장과의 인터뷰).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부대껴 왔으면서도 이런 사건 앞에 두고 서로 얼굴을 돌려야 했던 모습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다가오는 철저한 무력감과 패배감, 이로 인한 사서직 내부의 열등의식 또는 분열의식을 엿보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사서직 관장 진출의 봉쇄와 좌절 등을 겪으면서, 이 사건은 모두가 스스로 몸을 사리게 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문

제로부터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존의 본능을 체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피와 순종이 곧 생존원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스스로의 말을 잃어버리고, 대항할 수 있는 자생적인 이론을 개발하지 못한 채 외부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서 분실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같은 이유로 도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부심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자료 선정에서 장정과 제본을 최우선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서들의 이런 자의식이 형성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금서사건이다.

3. 금서사건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도서관의 수서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책의 장정이나 제본 형태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책의 장정과 제본형태를 꼽았던 것이다. 그것은 1960·70년대의 제본 수준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가 재산으로 등록된 장서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물질적인 보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인터뷰 과정에서 책의 형태를 중시한 답변이 나올 때마다 책의 형태가 아니라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책을 고르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이런 유의 것이었다.

한때 금서라든가 비치불가 도서를 부산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시민도서관으로 관리이관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나중에 문제 될까봐 서명이 노동 쪽이거나 출판사가 이상하면 구입목록에서 일부러 제외시키기도 했다(S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물론 책의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음란서적들이 많았다. 여자 사진 ……: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상하면 문제되니까 안 샀다. 기준은 주로 그런 식이지 다른 것이 없다. 이용자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많이 힘들었다(K3 관장과의 인터뷰).

이영희의 책이나 출판사가 이상한 것, 풀빛이나 일월서각 등의 책은 골치 아프다. 사지 말라고 한다. 괜히 그런 책을 서가에 꽂아 두었다가 문책 당하기 싫다. 그렇지만 실제 문책 당한 적은 없다. 그 전에 문제 될만한 책은 모두 들어내어서 시민도서관에 다 주어 버렸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문책 당하기 싫어할 것이다. 삼일공사라든가 정보과학사들 이랑 많이 싸웠다 (K3 관장과의 인터뷰).

위에서 첫 번째 증언에 나타난 '이상한 출판사'에 대해 증언자는 사회과학 전문출판사로 출발한 풀빛출판사를 예로 들었으며, 가장 문제가 될만한 저자로는 이영희를 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의 장서로는 '절대 채워져서는 안 될' 영역을 남기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반응들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 즉 <금서사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관', '중앙정보부', '삼일공사', '안전기획부', '정보과 형사' 등의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 공개 토론과 시장에 맡겨져야 할 도서관 장서의 내용에 대해 문제삼기 시작했을 때, 이에 대해 용기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자율성이 담보되어 있디손 치더라도 웬만한 이론적 무장이나 직업의식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원칙적으로 금서는 권력과 지식인의 상극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힘을 배경으로 하는 권력과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김삼웅, 1987, 5). 하지만, 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들의 힘을 배경으로 한 횡포가 출판계와 서점계는 물론 공공도서관 쪽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증언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언젠가 삼일공사(중앙정보부)에서 전화가 왔다. 이영희의 무슨 책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서가에 보니 다섯 권인가가 있었다. 내가 그걸 가 지고 직접 삼일공사로 가야 했다. 결국 겨우 인수증 하나 받아 돌아왔다. 그거라도 없으면 감사 때 할 말이 없어진다(K3 관장과의 인터뷰).

금서인줄 모르고 도서관에 넣는 경우도 많았다. 이미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80년대에는 안기부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넣었느냐, 목록을 조사하여 제출하라'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경우는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때는 공산권 자료를 많이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 적도 있다(K1 관장과의 인터뷰, 1997).

금서는 일절 대출이 안 되는 곳에 별도로 모았다. 내 생각에는 금서도 아닌 것을 금서라 하여 귀찮게 하는 것 같았다. 당시 중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는가. 그러나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공산권 책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상 쪽과 함께 야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도 애썼다(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행정 당국의 임의적인 잣대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금서 목록에 끼어 있는 책이 도서관의 서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서관에서는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당시 도서관 직원들의 막막한 심정을 읽게 된다.

한편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거대한 지배 메커니즘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길들여짐이 아니라 한 지식관리기관으로서의 조직의 길들여짐이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주성에 대한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아래의 두 증언에서는 지배 메커니즘이 규정한 '금서'의 잣대를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빼딱한' 것으로 체화시킨 모습과, 그 잣대를 쫓기 위해 애쓴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일부 소수의 빼딱한 책이 70년대 중반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통제가 되어 아예 출간조차 되지 않았다(L 전 수서 담당자(현 P 대학도서관 주무)와의 인터뷰).

88년도에 금서목록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구했다. 그런 책들은 모두 시민도서관으로 이관했다. 지금은 대부분 풀렸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수서할 때 계속 신경 써야 한다(K3 관장과의 인터뷰).

이러한 증언들은 한 개인이 지배적인 메커니즘에 동화되어 버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아래의 증언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규정한 것을 자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런 행동은 '스스로 몸을 사회에 거스르지 않게' 다스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 버린 모습마저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이념도서관의 경우 대학은 모르지만 공공도서관은 절대 사서는 안 된다. 과연 그런 책을 열람자들이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우리는 비취(비밀취급)인가도 없지 않은가(K3 관장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오면 지배 메커니즘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통제는 완결된 모습을 취하게 된다. 나아가 이 때의 경험이 축쇄가 되어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때 금서나 그와 비슷한 책을 모아서 시민도서관으로 이관한 적이 있다. 백산 등의 좌익 쪽 책을 사는 데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P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지금은 교육을 시켜 출판사나 서명이 이상한 책은 아예 안 사게 한다(K3 관장과의 인터뷰).

나도 나름대로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고 의식 있는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그런 책을 도서관에 넣으려고 할 경우 한번 더 망설여진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되도록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애쓴다. 이번에 지하철 노조 100년사에 관한 책을 넣을 때도 그랬다(K 수서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이런 사례들은 지배 메커니즘의 아류가 공공도서관 내부에서 스스로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금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음의 증언이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것이나 이름 있는 출판사 즉 법문사, 형설사, 박영사 등에서 나온 책은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름 있는 대학교수가 쓴 책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외에 신문서평이나 신문광고, 이 달의 추천도서, 금주의 베스트셀러, 국립중앙도서관 권장도서목록 등을 통해 수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할 말이 있다. 이것들이 우리가 수서할 때 주로 참고하는 서지들이다(K3 관장과의 인터뷰).

다시 말해서 좋은 자료를 선정해서 공중에게 봉사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외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자료라든가 언론기관의 광고나 서평에만 의존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사건은 사서들의 의식 속에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서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할 도서로서 소위 말하는 '리스트에 오른 도서'와 함께 '문제될만한 도서', '서명이 노동 쪽인 도서', '출판사가 이상한 도서', '사상적으로 이상한 도서', '삐딱한 책', '신경 써야 하는 책', '좌익 쪽의 책' 등의 잔영을 남겨놓았으며, 이와 함께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저자로는 이영희를, 그리고 풀빛, 백산, 일월서각 등의 출판사에 대해 상당한 기간동안 거리낌을 갖게 만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교수가 쓴 책이나 문체의 소지가 없는 이름 있는 출판사, 예를 들

면 법문사, 형설사, 박영사, 대학출판부 등에서 나온 책, 신문 서평이나 광고에 실린 책, 추천도서, 권장도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수용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삼일공사라든가 정보과학사, 문채, 공무원의 신분, 두려움 등이 매개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사서들이 지배 메커니즘에의 동화된 채 도서관의 장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창조성과 능동성을 상실하게 했으며, 도서관의 장서가 편향되게 축적되게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준만 등(1997, 9)의 지적처럼 '머리와 가슴 한 구석에 절대적인 성역과 금기를 만들어 준 이런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정에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갔던 것이다.

4. 결론 - 장서형성의 요인

지금까지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두 사건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에 주된 변수로 작용해 온 과정을 주로 사건 경험자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두 사건이 공공도서관의 정서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두 사건이 모두 외부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피해는 공공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점이다. <도서변상사건>의 경우 교육청의 행정직이 자신들의 인사상의 이권을 얻기 위해 유발되었으며, <금서사건> 역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언론 통제의 일환으로서 그 파장이 공공도서관까지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만 해도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만한 힘도 이론도 의지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으며,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좋은 책을 선정하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오히려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아예 하지도 말자는 주의가 팽배해 지게 만든 주된 요인이 된 것이다. 도서관의 일이라는 것이 일상의 업무만 처리해도 굴러가게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사건은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말살시키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앞의 두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들 사건의 본질을 엉뚱하게도 푸코에서 발견하게 된다. 푸코는 현대 사회가 어떻게 그 구성원을 통

제하며 길들이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통제의 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조흠, 1997, 309).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몸을 사회에 거스르지 않게 다스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대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공공도서관을 통제하고 길들이 온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이념을 강요하고, 의식의 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과, 또한 의식의 한 부분이 가려져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편향된 길을 걸어옴으로써 치를 수밖에 없었던 비용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이영희(1974, 29-30)에 따르면 남의 가치나 이념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바깥세계와 절연하는 장벽을 쌓아 둘러야 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종류의 장벽을 겹겹이 쌓아 둘러야 하며, 이것은 바로 부정하려는 제도나 사고방식에 자기가 변질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큰 줄기가 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단순한 읽을거리 제공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장서를 통해 사회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즉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J 수서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1998. 5. 14. 14:00 - 19:00. 부산대학교 교내 및 부산대학 근처 찾집.
- K 열람과장, J 열람과 주무와의 인터뷰. 1997. 11. 19. 14:00 - 15:30. S 도서관 열람과.
- K 전 부산시립도서관 열람과장과의 인터뷰. 1997. 11. 26. 11:00 - 14:00. 선생 자택 (부산 남구 소재).
- K1 관장과의 인터뷰. 1997. 11. 21. 13:00 - 14:30. H 도서관 관장실.
- K1 관장과의 인터뷰. 1998. 6. 11. 10:00 - 13:00. 부산대학교 교내 및 부산대학교 근처 식당.
- K1 수서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1997. 11. 18. 17:00 - 19:00. Y 도서관 자료봉사과.
- K2 관장과의 인터뷰. 1998. 5. 14. 15:00 - 17:20. P 도서관 관장실.
- K2 수서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1998. 5. 27. 17:00 - 19:00. 부산대학교 근처 찾집.
- K3 관장과의 인터뷰. 1997. 11. 5. 11:00 - 13:30. Y 도서관 관장실.
- K4 관장과의 전화인터뷰. 1997. 11. 25. 11:00.
- L 전 공공도서관 수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1997. 11. 6. 14:30 - 16:00. P 대학도서관 연속간행물실.
- P 전 부산시립도서관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1997. 12. 31. 09:40 - 12:30. 선생 자택 (부산 수영구 소재).
- S 사서과장과의 인터뷰. 1997. 9. 1. 14:00 - 17:00. S 도서관 사서과.
- 강준만, 1997, 『인물과 사상 2』, 개마고원.
- 강준만 등, 1997, 『레드 콤플렉스 -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삼인.
- 김삼웅, 1987, 『금서 - 금서의 사상사』, 백산서당.
- 김영기, 1998A, 「공공도서관 장서문제의 재인식 - 현대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圖書館文化》(한국도서관협회). 39(2): 31~45.
- 김영기, 1998B,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장서의 사회사」,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53(2): 51~93.
- 김정근 편, 1996,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 이영희, 1974, 『전환시대의 논리 - 아시아·중국·한국』, 창작과비평사.
- 이영희, 199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 조혜정, 1992,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1 - 바로 여기 교실에서』, 또하나의 문화.
- 조혜정, 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 문화.
- 조흠, 1997, 「힘, 몸, 그리고 성 - 미셸 푸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과 사상 4』, 개마고원.
- Barritt, L. S 등, 1990,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문음사.